

[ 현안진단 41호]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중국 민족주의,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함의

최지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I.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중국의 대응
- II. “정치종교” (political religion)로서의 중국 민족주의
- III. 동북아에서 민족주의 흥기가 가지는 함의

I.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중국의 대응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8월 15일 오전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2001년 취임 이래 매년 진행되었으나, 주변국들의 광복절 즉 패전일 당일 참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공식 논평을 통해 강력히 성토했고, 미야모토 유지 주중일본 대사를 소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강경한 공식 논평과는 달리 실제 중국의 대일본 항의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중국은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판의 초점을 고이즈미 총리와 같은 일부 보수우익세력에만 맞추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한국 정부에서도 큰 의미가 없다고 정리한 A급 전범의 합사/분사 문제를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본질적 문제로 설정하는 것은, 야스쿠니 문제를 축소하여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서둘러 봉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¹⁾ 사실 중국 정부의 이

1) A급 전범과 B급 전범은 전쟁범죄의 강도차이와 같은 수직적 의미가 아닌 단순히 범죄죄목에 따른 분류이기에, A급 전범의 합사/분사 문제는 일제의 침략전쟁에서 야스쿠니 신사가 가지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나카소네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당시부터 “(A항 전범) 합사문제만 올바르게 해결된다면, (야스쿠니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였고, 고이즈미 수상의 첫 참배 직전에 부임한 우다웨이 대사 역시 “일반 전몰자를

러한 대응은 낮은 것이 아니다. 2005년 상반기,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등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반일시위가 전 중국 대륙으로 확산되었을 때도, 중국 정부는 앞장서서 자국의 시위대를 단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임 이후 계속되는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서도 중국은 시종일관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 그 자체보다는 일본의 강경한 대중노선을 비판하여 왔다. 그 연장선에서 15일 참배 직후 발표된 외교부 공식 논평도 유사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외세와 봉건세력에 대한 투쟁과 혁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하였다는 높은 역사적·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주권문제에 관련해서 줄곧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온 중국공산당 정부가 왜 이렇게 중요한 민족적 사안에 대해 이중적 혹은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 중국의 이중적 태도는 현실적·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국제정치적으로 일본의 배후에 있는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의 사실이듯, 부시 정권하의 미국은 일본을 중국의 증가하는 지역적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며,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와 세계 속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만약 중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어 대만·조어대·동중국해 등에서 국지전 발발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미국과 직접 대면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 결국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은 일본과의 전면적 부딪힘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개혁개방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을 위해 아직까지 국내 경제발전에 주력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안정된 주변 안보환경의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주변 안보환경의 안정은 2002년 16차 당 대회를 통해 등장한 후진타오체제의 대외정책에서도 기본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과의 전면적 관계 악화나 극단적 대립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면이 존재한다.

세 번째로 국내정치적 요인, 즉 체제 안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생산관계보다 생산력주위에 경도된 사회주의 인식에 기반한 개혁개방정책(先富論)은 경제발전과 동시에 급속한 빈부격차와 도농·계층 간의 심각한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였다. 급기야 후진타오 체제에 들어서는 이러한 불평등에 항의하는 각 계층과 지역별 대규모 시위와 소요가 발생하여 체제위기까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같이 민감한 민족주의 정서와 관련된 사안은 쉽사리 대규모 반일시위로 확산될 수 있고, 이 경우

참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A항 전범이 합사된 것이 문제다”라고 하여 야스쿠니 문제를 마치 단순히 A항 전범의 “합사”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듯 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칫 반정부 시위로 전화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지난 2005년 전국 규모의 반일시위에서 중국 정부가 보여준 이례적인 강력한 진압대응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일본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책임대국(責任大國)”론과 같은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관련이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책임대국론”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과거 서구 강대국과 같이 물리적 힘에 의한 침략과 같은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국제적 사안과 관련하여 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고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대국으로서 권위를 자연스레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군사력과 같이 힘에 의존한 대외정책보다는 문화적·경제적 우위(Soft Power)에 의한 국제질서 형성에 더욱 주력하게 된다. 이러한 외교노선에 따라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무력이나 힘의 우위에 의한 정책보다는 일본과 자국민에게는 중·일 우호를 호소하고, 일본의 전쟁 책임을 몇몇 군국주의자들에게 한정시킴으로써 일본 군국주의 반대에 동참하도록 국내외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대국론”은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대국이라는 자기인식에 기반하여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예를 들어 야스쿠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대범하게 행동하겠다(실리추구)는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에 대비하여 명분을 축적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II. “정치종교”(political religion)로서의 중국 민족주의

이상과 같이 현재 중국은 현실적·전략적 각도에서 야스쿠니 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정부의 냉정하고 실용주의적 태도와 달리, 날로 강화되어가는 중국과 일본의 민족주의적 경향을 생각하면 사태를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다.

필자는 중·일 양국 등 동북아에서 강화되고 있는 민족주의(nationalism)는 근대 민족주의 일반이 지니고 있는 “정치종교”(political religion)로서 본질이 각 국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독특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종교”로서 민족주의는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을 개인에 앞서는 최고의 가치이자 불멸의 존재로 파악하는 “정치의 신성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Gentile 2006). 이는 민족주의가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감성과 신념에 따른 결단, 그리고 초월적 존재를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종교적 사유형식에 더욱 근접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정치종교”로서 민족주의가 중국에서는 어떠한 특성으로 발현되고 있는가?

칼 맑스에서 시작된 고전적 사회주의는 “노동자에게 국가는 없다”는 유명한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를 표방하기에 근대 민족주의 개념과는 대립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구소련의 해체와 천안문 사건 등 대내외적 위기로 인해 중국은 약화되어 가는 사회주의의 이념적 공백을 중화민족주의로 메우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 민족주의(애국주의) 담론이 급속하게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개혁개방 이후 등장한 인민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전통적 계급개념보다는 추상적 국민(중화민족)개념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가통합에 더욱 유리하다는 점, 장구한 역사적 전통에 근거한 강한 문화적 자부심과 민족적 우월감(중화주의)이 지식인과 인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신중국 성립이후에도 다민족 국가로서 국가통합을 위해 위로부터의 국가 민족주의적 정책(애국주의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다는 것과, 대만이나 해외 화교들의 대륙 투자와 통일을 위해 한족 중심의 인종적 민족주의(ethnic-nationalism)경향이 이미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거론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민족주의(애국주의)는 짧은 시간에 급속히 확산되어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신념체계나 내세관 그리고 인격화된 신의 존재 등을 그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일본 민족주의와 달리 중국 민족주의에서 인격신의 존재는 미약하다²⁾. 하지만 개인의 충성과 희생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신념체계라는 점, 그리고 민족이라는 불멸의 존재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이에 헌신(희생)함으로써 그 구성원이 영생을 얻고, 이를 다른 구성원이 추모(제사)하는 일종의 내세관과 구원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민족주의 역시 분명한 “정치종교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치종교”로서의 민족주의가 가지는 일반적 속성 외에도 중국 민족주의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더욱 “정치종교”적 특성을 띠게 된다. 첫째는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에서 연원한 중화주의라는 중국의 독특한 문화적 민족주의의 존재이다. 이를 정치종교로서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를 매개로 종교적 사유가 형성되는 문화종교적 성격으로 설명될 수 있다. 두 번째, 중국 민족주의가 지니는 “저항적 민족주의”라는 특성이다. 저항적 민족주의는 제국주의 침략의 피해자인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 제3세계 국가에서 목격할 수 있는 민족주의의 한 유형이다. 이는 피해자로서 집단적 경험과 기억에 의해 침략이라는 상황이 종결되어도 민족주의가 강력하게 존재할 수 있게 하며,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에서는 이를 국가재건을 위한 국민동원 이데올로기로 활용하고 있다. 저항적 민족주의는 쉽사리 정치종교로 전화한다. 이는 피침략이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하는 도덕적 우월성이 정치종교가 가질 수 있는 맹목성에 대한 거부감³⁾과 정당성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2) 정치종교로서 일본 민족주의에 대한 분석과 양자의 비교는 본문의 직접적 연구대상이 아니기에 다 음을 기약한다. 다만 원칙적인 면만 언급하자면, 일본민족주의의 경우 현인신(現人神)으로서 천황 의 존재 그리고 국가신도와 그 정점에 선 야스쿠니 신사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민 족주의에 비해 순수한 종교적 성격은 더욱 강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는 주로 합리주의에 기반 한 정치적 개인주의와 충돌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에 대해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저항적 민족주의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에, 가장 높은 신념의 형태인 종교의 모습을 갖기 쉽다.

대부분의 고등종교가 그러하듯 “정치종교”로서 민족주의 또한 이원론적 세계인식을 기초로 상대에 대한 타자화를 통해 자기행위의 정당성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종교”로서 민족주의는 중국과 일본 모두가 그러하듯 상대에 대한 배타적 인식을 기초로 하며, 적절한 대외적 긴장을 통해 내부의 결속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은 일단 가동되기 시작하면, 가장 순수한 원형의 실현을 위해 멈출 줄을 모르는 관성이 있다. 이와 같은 원리주의적 경향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경우 역사적으로 극단적 대외정책, 즉 전쟁이란 형태로 표출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강력한 공권력의 실용주의적 태도, 그리고 경쟁이데올로기의 존재로 인해 “정치종교”로서 중국 민족주의의 극단적인 전개는 제어되고 있다.⁴⁾ 특히 경쟁이데올로기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비록 약화된긴 하였지만 사회주의라는 대립되는 개념의 존재를 거론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심리적·사상적 검열기제로 비교적 강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다민족 국가라는 중국의 현실이 중국 민족주의가 쉽사리 동일한 형태로 조직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일반적으로 다민족국가에서 인종 민족주의가 강화되면 국가가 분열될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국가 민족주의는 오히려 여러 민족을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민족주의는 국가 민족주의(애국주의)이다. 그러나 대다수 인민들과 해외 화교의 민족주의는 인종(한족)적 색채가 강하고, 특히 서민층과 소외계층 사이에는 정부의 실용적 민족주의와 달리 원리주의적 성격도 매우 강하다. 따라서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인종민족주의와 국가민족주의(애국주의) 이외에, 정부(혹은 官)주도 민족주의와 대중민족주의 등 다양한 형태가 병존·경쟁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잡한 이데올로기 지형으로 인해 중국은 민족주의가 단일한 색채를 띠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강력한 국가권력의 존재로 인해 인민들의 민족주의적 열정은 당분간 일정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사회통합 이데올로기로서 중국 정부에 의해 강조되던 민족주의(애국주의) 담론은, 높은 효율성과 동시에 정치종교적 성격으로 인한 극단화되는 속성을 보이기에,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중적 면모로 다가오고 있다. 즉 국내적으로는 애국주의(국가 민족주의) 담론으로 “우리”라는 일체감을 한껏 고취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같은 민족자존(自尊)의 문제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중화민족을 대표하는 집단이라는 도덕적 정당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 민족주의가 처한 이같은 역설적 상황은 대외정책에서도 중국정부의 선택의 폭을 좁혀 극단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일본의 경우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시민 민주주의적 전통이 민족주의의 경쟁이데올로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Ⅲ. 동북아에서 민족주의 흥기가 가지는 함의

원래 중일 관계는 동아시아에서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국의 지역 전략과 미·일 동맹에 기초하여 정치·군사 강대국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전략이 상충되고 있어, 국가이익적 측면에서 양국은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양국의 강화되는 민족주의적 경향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중국에서 민족주의는 제국주의 시절부터 국가통합과 생존에 절대적 기능을 수행해 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피침략의 역사적 경험은 현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외교정책이 “주권외교”라 불릴 정도로, 국제관계 속에서 “주권, 영토, 민족”과 관계된 문제에서 줄곧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개혁 개방 이후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과격한 수사와 달리 실제로는 냉정하고 실리적인 자세를 견지해 오고 있다. 이에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같은 민족적·역사적 사안에서도 국내 민족주의의 과도한 분출을 경계하면서 일본에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에서 민족주의는 부국강병과 같은 애국주의적 호소와 강력한 공권력으로 인해 당분간은 일정한 수준에서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다. 일본의 신사참배는 단순한 추도가 아니라 향후 일본이 정치·군사 대국화로 나가기 위한 민족(국민)적 단결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연적 수순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장관도 기본적으로는 고이즈미 정권의 신보수주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보이기에, 앞으로도 중국의 민족주의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대결적 구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대만 등 “주권과 영토”에 관계된 사안에서는 극단적 상황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인민대중의 민족주의적 정서와 동의를 바탕으로 정통성과 합법성을 확보해 온 중국 공산당에게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같은 민족주의적 사안은 단순히 현실적·전략적 각도에서만 보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즉, 중국 정부가 민족자존과 관련된 문제에서 언제까지 소극적·평화적 자세를 견지할지 알 수 없고, 국내의 누적된 불만으로 인한 정치적 부작용과 대외적 고립 탈피를 위해 역으로 강력한 대응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양국의 민족주의적 대립은 양국 국민들에게도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양국민의 오해와 정서적 반감은 중일간의 대립구도를 실제보다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게 하여, 양국 정부의 과잉대응을 촉발하고 다시 더 큰 불신이 형성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결국 미·일 동맹과 중국이 대립하는 동아시아 신(新)냉전체제의 발생을 의미하는 역사적 퇴행으로 귀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과거 냉전체제가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동아시아 역사문제를 억지로 봉합함으로써 각국에서 민족주의가 온존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였다면, 탈냉전기 중일 민족주의의 대립은 해체된 냉전의 대립구조를 다시 부활시킬 이데올로기적 도화선 역할

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동북아에서는 민족주의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미국 네오콘의 냉전적·이분법적 인식과 더불어 정치종교로서 민족주의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가장 큰 위협이라 할 수 있다. 민족주의와 냉전적 사고는 씨줄과 날줄처럼 교차하며 서로를 지지해주는 힘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결국 동북아 시민사회의 퇴보와 인권의 후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억제하고 국가 혹은 시민사회 간 상호이해를 높여 지역에서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각국 시민사회의 연대와 한국정부와 같은 중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강상중 저, 임성모 옮김. 2004. 『내셔널리즘』. 이산
- 고야스 노부쿠니, 김석근 옮김. 2005.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의 국가신도-야스쿠니의 일본, 일본의 야스쿠니』. 산해
- 김기봉. 1999. “정치종교로서의 민족주의-독일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서양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 까치
- 다카하시 데쓰야, 현대송 옮김. 2005. 『결코 피할 수 없는 야스쿠니 문제』. 역사비평사
- 박진우, 나인호. 2005. “독재와 상징의 정치-나치즘과 일본 파시즘의 정치종교”, 『대중독재2: 정치종교와 해게모니』. 책세상
- 최장집. 2005. “동아시아 공동체의 이념적 기초”
(<http://Knsi.org/~Knsiorg/Knsi/Kor/center/view.php?no=762&c=1&m=11>)(검색일: 2006년 2월)
- Gentile, Emilio, 2006. Politics as Relig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ergensmeyer, Mark K., 1993. The New Cold War: Religious Nationalism Confronts the Secular Stat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osse, George L., 1990. Fallen Soldiers: Reshaping the Memory of the World War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08/23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